

## [ 종합·해설 ]

# 북핵 6자회담 '2막 1장' 열리나

북미 '모종의 합의'…핵폐기 초기단계 이행 가능성

4년 넘게 전개돼온 제2차 북핵 사태가 근본적인 국면전환의 기로에 선 것 같은 분위기가 감지되고 있다. 13개월의 공백기를 깨고 지난달 베이징(北京)에서 열린 제5차 2단계 6자회담에서 미국측이 '크게 주고받는' 이른바 폐기지 안을 북한에 제시한 뒤 잠시 흐름을 고른 북한과 미국이 지난주 독일 베를린에서 '모종의 합의'를 도출해냈다.

남북한과 미국, 중국, 그리고 일본, 러시아에서 전해오는 소식들을 종합해보면 6자회담의 핵심당사자인 북한과 미국이 베를린 협의 내용을 바탕으로 차기 6자회담에서 '크게 주고 크게 받는 협상'을 하기로 한 것 같다. 외교가의 관전 결과다.

송민순 외교통상부 장관은 이를 두고 차기 6자회담이 개최되면 '3막짜리 드라마' 가운데 '2막 1장'을 시작하는 것이라고 말했다. 2005년 9. 19 공동성명 합의로 1막은 끝이 났으며 이제 새로운 막이 열린다는 뜻이다.

지난달 6자회담에서 미국의 크리스토퍼 허처만은 폐기지안을 폭넓게 제시하면서 '워싱턴 수뇌부의 뜻'을 분명히 했다.

미측은 영변 5MW 원자로 동결-IAEA(국제원자력기구) 사찰 허용-핵 프로그램 신고 등으로 구성된 것으로 알려진 초기단계 이행 조치를 수용할 경우 ▲문서화된 안전 보장 및 테러지원 국 명단에서의 삭제▲식량 및 경제지원 ▲국교 정상화 협의 체수 등의 협의 조치를 취하겠다는 내용의 '폐기지안'을 제안한 것으로 전해졌다.

송 장관이 말한대로 말뿐이 아니라 핵폐기기 위한 초기단계조치 이행에 합의한다면 북핵 사태, 나아가 한반도 지평은 큰 틀의 변화가 불가피할 전망이다.

영변의 원자로 가동이 중단되고 IAEA 사찰단이 다시 북한땅으로 들어가며 주요 핵시설에 감시 카메라가 설치되는 등 핵폐기 이행을 위한 기초행위를 위한 작업이 부산하게 북한 땅에서 펼쳐질 것이다.

물론 아직까지 변수는 많다. 힐 차관보가 언급한 대로 '몇 가지 이슈에 대한 합의'가 있었다지만 '합의하지 못한 이슈들'에서 폐기지 안이 다시 충돌할 가능성은 상존하고 있다. 게다가 불신의 골이 깊은 북미 양측이 예기치 않은 신경전으로 시간을 허비할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

/박지경기자 jkpark@kwangju.co.kr



탈북 난민 강제북송 규탄

탈북난민 강제북송 저지 국제캠페인은 23일 오후 효자동 주한 중국대사관 앞에서 중국 정부의 국군 포로 가족 강제

/연합뉴스

## 여고생 진학률 급증…女風 진원지는 대학

1970년 28.6%→2005년 80.8%

여성의 사회참여가 늘면서 여고생들이 대학 등 고등교육기관에 진학하는 비율이 1970년대 20%대에서 2005년 80%대로 급 상승했다.

또 평생학습 문화가 점차 확산되고 있지만 평생학습 기회는 고학력자에 집중돼 있는 등 학력별 양극화가 큰 것으로 나타났다.

교육인적자원부는 이런 내용의 각종 인

적자원 관련 통계를 담은 '국가인적자원개발 백서'를 23일 발간했다. 고등학교에서 대학교로 진학하는 여성의 비율은 1970년 28.6%에 그쳤으나 2005년에는 80.8%로 급증했다.

한편 2004년 기준으로 평생학습 참여율 (한해 동안 한번이라도 평생학습에 참여한 비율)은 초졸 이하 학력자 5.0%, 중졸자 9.1%, 고졸자 18.7%, 대졸 이상자 42.6%로 학력별 차이가 심한 것으로 나타났다.

/연합뉴스

## 유엔사령관, 작통권 행사 못해

주한미군사령부, 한국군 이양 공식 입장 밝혀

주한미군사령부는 23일 "유엔사령관은 (전시) 작전통제권이 한국군으로 이양되며 한국군에 대한 작통권을 행사할 수 없다"고 공식 밝혔다.

주한미군은 이날 '유엔사의 미래에 대한 주한 미군사령부의 입장' 자료를 통해 "유엔군사령부에 대한 세부적인 변경사항은 더 작업을 해야겠지만 분명한 것은 유엔군사령관은 작통권이 양 이후 한국군에 대한 작통권을 행사할 수 없다는 점"이라고 말했다.

주한미군은 "이 때문에 유엔군사령관은 정전협정을 유지하기 위해 병력을 동원해 위기고조 상황에 대처할 권한을 가지지 않는다"고 덧붙였다.

즉 유엔군사령관은 남북간 무력분쟁이 빚어질 경우 이를 막으려고 한국군 병력을 동원하는 권한을 행사할 수 없다는 것이다.

주한미군사령부가 한국군으로 작통권이 이양된 뒤 유엔군사령관의 작통권 보유 여부에 대한 입장을 내놓기는 이번이 처음이다.

주한미군은 "작통권의 한국군 이양은 강력하고 역동적인 동맹관계의 자연스런 발전이며 한국군 지휘관들과 한국군의 강하고 타원한 능력을 반영하는 것"이라며 "유엔사의 역할을 변경해 한국군에 작통권을 이양하려는 양국의 결정을 약화시키려 한다는 추정은 비논리적이고 국민의 이익에도 부합되지 않는다는 점"이라고 말했다.

별 사령관은 전시 및 평시에 한국군이 (작전) 주도하고 유엔사와 주한미군은 지원역할을 하도록 하는 양국의 결정을 여러 번 재확인했다고 주한미군은 덧붙였다.

/연합뉴스

## 세하택지 파문 철저히 책임 물어야



김주정

사회1부 차장

도면유출에 이은 투기 열풍으로 물의를 빚고 있는 광주 서구 세하택지 개발 사업을 광주시가 전면 취소했다. 개발이익은 투기꾼이 먹고, 그 피해는 시민들이 안전순환의 고리를 끊기 위해 계획이 철회돼야 한다는 여론을 받아들인 것이다. 늦었지만 다행스런 일이다.

하지만 이 과정에서 드러난 광주시의 우왕좌왕하는 모습은 시민들의 비난을 받기에 충분했다.

박광태 광주시장은 지난 16일 오전 간부회의에서 "행정불신을 초래할 사업을 결코 허가할 수 없다. 도시공사에 사업중단 명령을 내리겠다"고 했다. 그러나 같은 날 오후 임우진 행정부시장은 기자실을 방문, "사업을 중단할 만큼의 투기가 있는 것은 아닌 것 같다"며 원점으로 되돌려 버렸다.

유사한 상황은 취소결정을 내린 22일 반복됐다. 관련공무원 2명에 대해 경찰이 사전구속영장을 신청했다는 소식이 전해진 상황에서 건설국장과 광주도시공사 사장이 이날 오전 기자회견을 자청, "여론이 좋지 않다고 그동안 추진된 사업을 중단할 수는 없다"고 강조했다. 그러나 이날 오후 광주시 고위 간부들은 3시간여의 난상토론 끝에 이를 번복했다.

수사를 받고 있는 관련 공무원도 경찰 수사과정에서도 관련 도면을 파쇄했다고 진술했다가, 뒤늦게 제출하는 등 이해할 수 없는 일들은 계속됐다.

더 비단을 받는 대목은 택지개발을 추진하면서 관련자들이 '기본'을 지키지 않았다는 점이다. 사업주체인 광주 도시공사의 경우 관련부서인 도시계획과와 건축주택과에 보고했던 개발정보를 포함한 도면을 회수해야 했지만, 그러지 않았다.

지난해 11월 자체감사에서 도면 유출이 확인된 이후 수사의뢰·개발계획 중단 등 적절한 조치를 취하지 않은 것도 의혹을 받는 부문이다.

원천적으로는 수의성을 앞세운 개발논리를 쫓아 광주시내에 얼마 남지 않은 미개발 지역을 고종 아파트 단지로 바꾸려 한 발상도 비난의 대상이다. 도시공사는 2004년 세하택지 개발을 추진할 당시 시청 내부에서는 인근 공군부대의 탄약고 이전 등을 기다려 보다 광범위하고 미래 지향적인 도시계획을 세우자는 의견이 있었다. 미분양 아파트가 1만세대나 되는 상황에서 무작정 택지를 개발해야 하는 지에 대한 의문이 제기된 것이다. 그러나 수의성을 내세우는 도시공사의 논리가 힘을 얻으면서 물러버렸다.

이제 남은 것은 철저한 책임소재 규명과 재발방지 대책 마련이다. 택지개발 전격 취소가 경찰의 전방위 수사라는 '소나비'를 피하기 위한 것이 아니라면, 땅을 다지는 기회로 삼아야 할 것이다.

/jinews@kwangju.co.kr